

초대 과학기술부총리가 할 일

글_곽재원 중앙일보 경제부 부국장 kjwon@joongang.co.kr

국가과학기술관리 체제가 획기적으로 정비될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2기 정부개혁추진이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의 역할재편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확정된 과기부 개편방안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과기부가 '혁신주도형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 조정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기부 창설이래의 과학기술계의 염원이며,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할 일이다.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수평적, 경쟁적 관계에 있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 타 부처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과기부에 부여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연간 5조5천억 원(올해 기준)에 달하는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조정권은 각부처마다 연구개발관련 사업이 늘어나면서 벗어났던 각종 논란, 갈등은 물론 일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중복투자를 막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런 권한을 갖는 만큼 응당 예산 쓰임에 대한 평가사업도 맡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평가)과 선수(사업)의 이중 자격을 배제하기 위해 과기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상당부분을 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일을 추진할 팔다리로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과기부 장관(부총리)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사무국에 100여 명의 전문가(과기부 파견 50명, 각 부처 파견 30명, 외부전문가 20명 영입 등)를 배치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곧 준비기 확대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실어 6월중순께 임시국회에 상정시켜 올해안에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을 통한 국가혁신체제정립은 지난 1년동안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 제도정비안까지 큰 틀은 거의 완성된 셈이다. 이제부터 실질적이고 확실한 추진이다. 아주 치밀하게 해야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지난 20년간 과학기술정책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개혁과 개편을 보면 알 수 있다.

우호적 방관·부처간 문화충돌 극복이 관건

이번 개편안이 전례없이 획기적인 것으로 기대가 크게 사실이지만 그런만큼 또 다른 논란과 비효율을 낳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먼저, 과기부장관의 부총리 격상문제다. 과기부가 정부내에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부총리급 부서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기술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조정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기대는 크다. 정부부처내에서 마이크로경제팀의 입김이 커진다는 얘기도. 그러나 재경부나 교육부가 커버해야할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 교육분야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실정에서 "부총리가 있으니 과학기술의 문제는 과학기술부가 풀어라"는 식의 우호적 방관(benign neglect)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오랜동안 경쟁관계에 있던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사이의 컬쳐크래시(문화충돌)를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부총리의 개인적 능력과 성향에 의존해 푸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들 3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과 산업의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R&D 분야를 조정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예컨대 기초연구-목적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생산기술연구 등이나, 미래연구-대형연구-국제협력연구 등으로 나뉘야 한다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어디에 맞춰 어느 부서에 무엇을 맡겨야 할지 어려운 문제다. 현재 이들 부처가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재조정하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각기 다른 기금과 예산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 기

술조성사업, 정보화촉진사업, 프린터사업 등)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부처의 문화는 판이하다. 이외에도 국방, 보건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관련부처의 장관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종전과 같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정부조직과 기능재편이 몰고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영향이 만만치 않게 클 것이다. 정부출연연은 이미 국무총리실산하의 각종 이사회에 소속돼 있다지만 연구분야와 범위에 따라 사실상 특정 부처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기능재편은 곧바로 출연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가 개편되고 출연연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난맥상을 여하히 이룬 시일내에 극복할 것인가도 과제다.

더구나 일각에선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 대학이 주도하고 그 밑에 협력파트너나 아예 부속기관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역균형발전의 이름아래 일부 주요 연구소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출연연이 벌써부터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이 방대해지면 해질수록 각 부처 파견자들과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고 자칫 로비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대 인력을 파견할 과기부는 크게 축소된 본부와 국과위의 사무국에서의 일을 어떻게 분담해 나갈 것인지, 국과위의 역할 확대로 사실상 유명 무실화될 지 모를 국가과학기술자문위는 어떻게 변신시켜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할 대목이다.

대통령 주도 '과학혁신운동' 이끌어야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과기부장관(부총리)이 주창하여 재경부장관(부총리)과 교육부 장관(부총리)등 3인이 매달 1회 만나 논의하는 '경제혁신시스템 연구회'(가칭)를 운영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경제연구를 강화한다. 이 연구는 향후 과학기술정책이 마이크로-세미마이크로-매크로경제를 커버하여 다른 경제부처를 설득하는 도구로 삼는다.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장관 모임은 특정없이 사안에 따라 수시로 모이는데 바람직 하다.

둘째, 3개부처의 획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각 직급마

다 순회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예컨대 7급직원을 공동으로 뽑아 부처를 돌려 자리를 잡게하는 방안도 있다. 최근에는 고급인력들이 고시대신 7급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육성하고 능력에 따라 3~4년후 5급으로 승진시키면 고시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3부처의 주무 국장으로 구성된 '국가연구개발회의(가칭)'를 운영한다. 여기엔 출연연대표들과 대학연구자들을 참석시켜 산학연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짤다. 선진국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긴급과제(테러, 환경, 식품)-중기과제(생산기술, 성장동력)-장기과제(대학기초연구, 고령화사회대비연구)-국가위신과제(우주항공, 차세대원자력) 등의 기준을 갖고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을 돌리고 있다.

넷째, 출연연을 에이전트화 하는 것이다. 완전 민영화까진 시간이 걸리지만 상당부분 독립채산제로 하면서 공공부문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출연연의 사정이 다르므로 각 연구소와 논의를 거쳐 일정표를 만든다. 다만 출연연의 현재 자체 개혁이 강력하게 모색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를 더욱 줄이고 자율에 맡긴다음 변화의 모습을 봐가면서 혁신안을 추진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은 해당부서의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관련현안들을 반드시 갖고 나와 보고토록 한다.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참석자와 회의의사 요지를 인터넷에 공개 한다.

여섯째,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 연구개발과 그 외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과 동시에 평가결과를 추진체제의 개선과 예산배분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법에 확실히 넣어 두어야 한다. 그런다음 명시 된대로 대규모 신연구개발사업, 국과위가 지정하는 연구개발(과학기술과 사회경제상 큰 정세변화가 예상되는 것, 계획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예상외로 전개되는 것,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윤리·안전성에 관한 것, 국가적으로 부처간에 추진과 조정이 필요한 것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 국과위가 전문가를 동원하여 평가를 행한다.

끝으로 대통령이 주재하여 '과학혁신운동'(가칭)을 펼치도록 한다. 이는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 위한 범국민적운동으로 정착토록하는 것이다. ㉓